

##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과 오늘의 북한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 기념일이다. 현재 북한상황으로 보아 ‘기념일’이라는 용어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노동당은 북한의 집권당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선군정치’가 풍미하여 노동당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가 군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노동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선노동당이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및 1993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고, 당중앙위 정치국이 무력화된 점, ‘선군정치’가 지속되고 김정일 1인에 의해 당론이 좌우되는 점 등으로 인해 당기능이 완전 정지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나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유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중앙위의 통제,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에 의한 당·정·군 권력엘리트 통제 등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당우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1945년 창건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민의의 대변기관 역할을 충실히 한 적도 있었으나 김일성이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고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겪으면서 정당정치를 벽안시하기 시작하자 조선노동당은 주민의 의견보다는 김일성의 눈치를 살피는 기계적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정당정치를 혐오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구소련이나 중국과 연계를 갖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거창하게 해석하면 노선투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투쟁이었던 것이다. 8월 종파사건이후부터 김일성이 ‘사대주의’를 극히 혐오하고 ‘종파주의’를 경원시하기 시작한 이유도 정치적 반대파들이 강대국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주체’가 주요한 담론이 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그것이 더욱 정교화 되었다. 특히 1967년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부터는 주체가 주체사상으로 발전하였고, 맑스·레닌주의를 뛰어넘어 지배이데올로기화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주체사상화의 배후에 김정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독재체제 합리화를 위해 주체사상을 정교화시키고 심분 활용하는 주역이었다. 물론 이를 발판으로 그는 후계자가 되었다.

주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대주의자로 몰려서 숙청되었다. 친일사대주의, 친소사대주의, 친중사대주의 등은 물론 ‘친미사대주의’는 가장 큰 죄목이 되었고, 이 누명이 씌어지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체제유지를 위한 ‘전가의 보도’이자 모든 주민들의 행동규범이었으며 중심가치였고,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으로 세칙화되어 일종의 ‘10계명’처럼 되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유사종교체제’라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적 강령인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이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되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교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교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것이다. 다만 주객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주체사상 ‘전도사들’인 노동당원들이 김정일의 안위 유지와 ‘강성대국 건설’의 ‘향도’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군대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군사상’이라는 것이 만들어 졌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에 입각한 1인 독재체제는 무슨 문제를 야기시켰는가? 수령주의가 났든 ‘장군주의’가 났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노동당이나 인민군대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김일성·김정일의 사당과 사병’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은 정치적 독재, 경제적 피폐, 사회적 억압, 군사적 호전성, 대외적 고립 등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북한내부에 이러한 엄혹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세력이 부재하다는 점일 것이다. 즉 노동당 63년 강권통치의 결과로 소위 ‘내파적(implosive)’ 변화의 주역이 될 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더욱 유념해야 할 점은 김정일이 모든 오류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으로 돌리는 한편 ‘일심단결’을 통해 이를 물리치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통제된 정보만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타파되지 않고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현상을 타파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조선노동당이나 군대, 주민들은 현상을 타파할 기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비롯한 외부가, ‘북한개방화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경제난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타의적으로 도입된 북·중 국경무역으로 인해 북한 내에는 많은 양의 자본주의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다. 심지어 남한비디오나 드라마, 노래가 보급되고 있고, 북·중 국경 변방에서이기는 하지만 핸드폰이 가능하다. 남한이 잘 산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남한가족의 송금으로 인해 월남자가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나 북한내에 이러한 요소들을 조직화해서 승화시킬 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이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생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일본과의 수교,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남한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을 원한다면 우리는 ‘대북 개방화 정책’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다. ‘북한적 현상’은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 theory)적 관점에 의하면 북한상황과 주변상황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